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 전망과 과제

김 은 옥(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	1
II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4
III	주요국 및 국제사회 동향	7
	1. 미국	7
	2. 중국	9
	3. 러시아	10
	4. 유엔	11
IV	전망	14
V	정책 제언	16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김 은 옥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I 북한의 6차 핵실험 평가

- 북한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상황이 극적으로 고조됨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중대 보도』 (9.3, 15:30))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기 건설 구상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함
 - 또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결정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고 주장
- 북한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시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고 9월 5차 핵실험 당시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이라고 한 데 이어 6차 핵실험을 통해 ‘ICBM에 탑재 가능한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임
- 국방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지진규모 5.7Mb로 폭발위력을 약 50kt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9월 5차 핵 실험과 비교시 5배 정도 위력에 해당함
- 6차 북핵 실험의 인공지진 규모와 관련, 우리 기상청이 5.7로 평가한 반면 일본정부는 6.1, 중국 지진대망(中國地震台網)과 미 지질조사국(USGS)은 6.3, 러시아 지진당국은 규모 6.4로 평가함
 - 따라서 진도를 중심으로 추산할 경우,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최소 50kt 내외에서 최대 400kt 내외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남

- 북한이 의도적으로 폭발력을 낮추어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바, 북한은 중대 보도를 통해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kt급으로부터 수백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
-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시험인가의 진위 여부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종 평가는 유보적
 -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7의 폭발위력으로 볼 때 6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보다는 증폭핵분열탄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기타 외국 기관들이 6.1 이상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최근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수소 폭탄 실험으로 잠정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매트지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6차 핵실험에서 "진전된 핵폭발 장치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원자탄의 폭발력을 높인 증폭 핵분열탄인지 북한이 주장하는 2단계 열핵폭탄(수소탄)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밝힘
- 6차 핵실험이 5차 핵실험에 비해 폭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기술적 차원에서 더 이상의 핵실험이 불필요하다는 평가도 제기됨
 - 북한이 핵 고도화 단계중 핵탄두 기폭장치 부문 목표는 사실상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수소탄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소형화·경량화 기술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EMP(Electro Magnetic Pulse) 공격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함

〈표 1〉 북한 핵실험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지진규모	3.9Mb	4.5Mb	4.9Mb	4.8Mb	5.0Mb
폭발위력	0.8~1kt	3~4kt	6~7kt 이하	6kt	10kt
실험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 첫째,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대북 압박에 대한 반발로 이와같은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국제사회가 지난 8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고강도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
 - 특히 미국에 대해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향후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최근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미, 미중간 갈등 국면을 고려, 대북제재 차원의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의도도 내포
- 둘째, 지속적인 핵투발 능력 향상에 이어 핵 고도화를 완성하기 위한 기술적 필요성
 - 이번 6차 핵실험은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핵실험이 ‘최종 단계’에 근접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됨
 -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핵융합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급진전된 수소폭탄 개발능력을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EMP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지님
 - 미국 미사일전문가인 헨리 쿠퍼 전 전략방위구상 국장은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미국 의회 EMP위원회 조사를 통해 2004년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정은정권은 첫 번째 공격수단으로서 직접적인 핵·미사일보다는 핵 EMP 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¹⁾
- 셋째, 핵보유국 반열에 이르렀다는 점을 대내외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
 - 국제사회를 향해 핵기술의 진전을 과시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의도
 - 대내적으로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을 앞두고 체제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지님

1) 정성장외,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세종정책브리핑(2017.9.5.)』 p.6

II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은 헌법과 법률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함
- 김정은 정권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핵전략을 지니는 바, 이는 협상용 이라기보다 핵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김정은위원장은 2013년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며, 둘째 핵 보유를 영구화할 것이고 셋째, 핵무기 능력과 핵 타격 수단의 능력을 지속 발전시킬 것이며 넷째,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북한은 김정은정권의 안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실험을 북한 나름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은 스스로 인식하는 절박한 체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 다원화와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어 외부의 압박과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신문』은 6차 핵실험 이후인 9월 9일 사설에서 “국방공업 부문에서는 당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받들어 우리식의 최첨단 주체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함
 - 결국 북한은 스스로 정한 스케줄대로 핵능력 완성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핵 고도화 완성’ 예상 시점이 급격한 속도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북한은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핵보유국의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함
- 북한은 김정은 집권이후 6자회담을 포함한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함
 - 2013년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음.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북한 핵개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보장인 바, 북한은 ‘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으며 그 해결도 미국의 적대정책 전환 여부에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폐를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며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 핵 보유국간 군축을 요구
 -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인 6일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평양에서 열린 6차 핵실험 자축 군중집회에서“미국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북한은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핵능력 고도화를 기반으로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
- 2010년부터 북한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론을 견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선 평화협정론’을 제기함
 - 2015년 12월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뒤섞어 놓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된 진리, 조미가 전제조건 없이 마주앉아 평화협정 체결부터 논의해야”한다고 밝힘
- 2015년 1월 9일 북한은 한미가 군사연습을 중단 또는 축소할 경우 자신들도 핵실험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함
 - 또한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기
 - * 주요 내용은 i)남한 내 미 핵무기 공개 ii)남한에서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 및 검증 iii)한반도 및 그 주변에 미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담보 iv)북한에 대한 핵위협, 핵 사용금지 확약 v)주한미군 철수 선포

- 아울러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주력하면서 김정일 시대의 ‘안보(비핵화) 對 경제(에너지 및 경제지원)를 교환’하는 기존 방식의 협상을 거부함
 -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지원 확보’를 대미 협상의 최종목표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의 부산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양상
 - 2013년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위원장은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 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라고 밝힘
-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10~20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
- 국방부가 올해 1월 발간한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을 약 50kg 보유(핵무기 6~12개 분량),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 상당수준 진행, 핵탄두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 도달한 것으로 평가함
 - 조엘 위트(Joel Wit) 미 존스홉킨스 초빙연구원은 ‘2015년 2월 북한이 이미 10~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최악의 경우 2020년까지 100개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전망함
 -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2016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20년까지 50~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핵무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례를 통해 사실상 핵국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6차례의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핵보유국을 선언한 바 있음

III 주요국 및 국제사회 동향

1. 미국

-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함
-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긴급 소집된 NSC 회의 후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
 -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우려하며, 국제사회가 핵능력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됨
- 현 단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임²⁾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7월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골자로 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對이란·러시아 제재와 함께 통과시킴
 - 대북제재 법안에는 i)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ii)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iii)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한 국가의 선박운항 금지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담겨 있으나, 제재 이행여부를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에 맡기는 한계를 지님

2) 김현욱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 관계,” 민주연구원 내부간담회(2017.9.6) 토론문 참조.

-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은 미·중간의 경제전쟁을 의미하는 바, 중국뿐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임
- 트럼프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추진
 - 미국은 중국이 북한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해 옴
 - 지난 6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럼프대통령은 “시주석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금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함
- 한편,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 메시지가 혼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는 트럼프정부 대북정책의 구체적 전략 마련 및 한미 대북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정권교체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8.1)고 직접대화론을 언급하는가 하면, 다음날 펜스 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북한과 직접대화는 불포함된다’고 언급하는 등 미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최대 압박과 관여’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에 주목할 필요
 -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관여”정책의 주요 내용은 i)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ii)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 사용, iii)북한 정권교체 불추진, iv)최종단계로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해결인 바, 큰 틀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기조를 같이 함

2. 중국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유관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강조하는 등 4차, 5차 북핵실험 당시와 유사한 입장을 보임
- 정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지키고 국제사회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논평을 내놓음
 - 아울러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북중 국경봉쇄, 대북 원유공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북중간 전면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
- 6차 북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차단’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됨
 - 북한은 원유 수입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에서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바, 원유공급이 중단될 경우 북한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임
 -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은 북한 체제 붕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옴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는 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3대 원칙’을 토대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並行)’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핵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지만, 중국은 큰 틀에서 기존에 주장한 ‘한반도 문제해결 3원칙(비핵화, 평화안정, 대화협상으로 문제 해결)’을 견지할 것
 -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후 중국 외교부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호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반도 긴장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둔 상황인 바,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대북제재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압박 발언에 대해 중국 경쑹(耿飫)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 ‘왕이 이니셔티브’를 주장했던 중국은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론(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논의)을 표명
- 중국의 쌍궤병행론은 북한의 ‘선 평화협정론’과 미국의 ‘선 비핵화론’ 주장을 절충한 것
- 한편,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북핵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중간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
- 중국은 강대국 정치를 표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

3. 러시아

-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국제사회에서 고강도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이 주목받게 됨
- 최근들어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올해 상반기 북러 양국간의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모색
- 대북 원유공급 제한, 신규 북한노동자 고용금지 등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의 참여가 관건
- 러시아는 유엔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이행을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적극적 역할 및 양국간 협력 강화를 모색
- 지난 6일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양국간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지방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4. 유엔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추진되었으며, 6차 핵실험 9일만인 12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됨
-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6차 북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에 가장 강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대북제재 결의안을 12일 표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음
-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57일이 소요되고 같은해 9월 5차 핵실험 당시 결의안 채택까지 석달 가량 소요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결의안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것임

〈표 2〉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차 핵실험 직전 안보리 결의안

北 도발	4차 핵실험 (‘16.1.6)	5차 핵실험 (‘16.9.9)	北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17.7.4, 28)
안보리 결의	2270호(‘16.3.3.) 핵실험후 57일	2321호(‘16.11.30) 핵실험후 82일	2371호(‘17.8.5) 7.4 발사후 30일
결의 주요내용	△對北 석탄·철 (민생예외) 등 수출금지, △무기금수 확대, △금융제한, 제재대상 확대 등	△對北 석탄수출 상한 설정, △北 외교활동 제한 △해상·항공차단 강화 등	△석탄·철(예외삭제)·납·해 산물 수출 금지, △北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對北 합작사업 신규·확대 금지 등

출처: 외교부

-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자금줄 차단’을 예고한 미국과 과도한 제재를 우려한 중·리가 절충점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 새로운 결의안의 핵심은 대북 원유 수출 상한제와 북한의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 금지 등임
 - 당초 초안에는 섬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출 금지, 원유공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되고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 반면, 결의안 최종안에는 섬유제품 수출 금지가 포함되었지만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나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제외되었으며, 원유 공급량은 일정수준 제한하기로 함
 - * 대북 원유 수출은 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경유 등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설정
 - * 이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채택한 결의 2321호의 석탄수출 상한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표 3〉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 주요 내용

대상	주요 내용
유류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제품 연 200만 배럴로 제한 (현 북한에 공급되는 양의 55% 감축 전망) - 원유수출은 현행 유지 (현 원유 공급량 400만 배럴로 추산) - 액화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의 대북수출 전면 금지
섬유제품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섬유의류 수출 금지
김정은 제재대상 포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김여정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제재 대상에 개인 1명(박영식 노동당 군사위원), 단체 3개(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추가
북한노동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북한노동자 신규허가 금지 (기존 노동자 기간 만료시 추가허용 불가)
공해상 북한선박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품목 운반 근거가 있을 시 귀국 동의하에 공해상 검색 가능
북한과 합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 최종 결의안은 초안보다 상당부분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은 원유 공급 중단항목을 최초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시켰다는 실리를 챙겼고 과도한 대북제재에 반대한 중국은 명분을 챙긴 것이라고 평가됨
-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전면 금지를 포함시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인도주의적 영향’을 내세워 이 조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결의안은 대북 원유공급을 전면 중단하지는 못했지만 원유공급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첫 제재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원유 공급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님
 - 또한 북한 권력기관의 자금줄인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길을 차단한데 이어 새로운 해외노동자 취업도 규제한 것도 새로운 결의안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IV 전망

□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 채택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당분간 '강 대 강'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더 강한 대북제재의 가능성을 시사함
 -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패는 중국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도 중국이 미·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 강도를 조절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됨
-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실험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 등을 계기로 ICBM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음
 - 북한은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던 KN-08(화성 13형), KN-14 등 3단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³⁾
 - 김정은 위원장이 올초 신년사를 통해 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이후 북한은 미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하는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초 고각발사로 1,000km 정도를 비행하는데 성공함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3형의 실험 가능성도 제기되며,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를 고려할 때, 김정은정권은 이같은 과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됨

3) 김진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핵개발 전망," 세종논평(2017.09.05), p.2.

- 북한이 2,3년 내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에게 남은 과제는 실제 가혹한 운용환경으로부터 탄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기술임
-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기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
-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할 경우 북한이 본격적으로 수소폭탄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 일정기간 갈등 국면이 지속되다가 북한이 평화공세로 전환하면서 ‘북미 대화’가 극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i)군사적으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ii)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대통령이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등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북한의 반격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미칠 피해, 전면전으로의 확산과 중국의 개입 우려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바, 실행 가능성이 낮음
- 1994년 클린턴 정부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대북 군사적 옵션이 실행되지 못함
-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지금 미국의 초점은 군사적 옵션이 아니라 외교·경제적 옵션”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트럼프정부의 정책방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미국은 압박과 제재를 최대한 강화할 것이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구사할 것임

- 미국내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매우 근접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의 1.5트랙 북미 대화에서 최섉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대북제재 해제,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을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8.1)”며 북미 직접대화론을 제기한 바 있음

V 정책 제언

■ 원칙≫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추진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베를린구상’ 2017.7.6)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8.15 경축사)

- 「비핵·평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함으로써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
-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지향국가”로서의 대외국가상을 정립해야 할 것
-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
-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 천명
-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압박과 관여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 있음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 관련국 뿐 아니라 EU나 ASEAN 국가, 호주 등 북한과 오랜기간 관계를 맺어온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1991년 이후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임
-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북한에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미국의 핵이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가져오고 일본의 핵 무장 등 동북아 안보 위기를 야기
- 핵잠수함이나 폭격기 등 미국이 제공하는 현 수준의 확장억제력만으로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바, 군사적 효용성도 낮음

■ 추진전략»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상과 함께 '북한 변화'를 전인하는 『포괄적 관여전략(Comprehensive Engagement Strategy)』 추진

“극동지역에서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양국의 번영은 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 러시아 동포간담회 연설문, 2017.9.7)

-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한 해법 마련
- 북핵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체제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바람직

- 일차적으로 북한 핵의 '동결'에 주력하여 북핵의 고도화를 막고, 최종 목표로 완전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추진
- 비핵화 추진과 함께 북한 체제의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는 관여전략을 병행, 북한의 변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 모색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당면한 위기상황에 매몰되는 한계를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한러, 한중이 공동으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안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함
- 북한 변화를 위한 관여전략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견인하는 '북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추진
 - 북한 국제화는 '북한이 국제적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함
 - 북한 스스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압박과 지원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행위인 바, 북한 내부의 '의미있는 변화'를 추동하고 이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 추진
-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남북한 '공존'을 넘어 '공진(co-evolution)'과 '공영(co-prosperity)'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추진
 - 북한 김정은정권이 '선군(先軍) 정치'에서 '선경(先經) 정치'로 진화할 수 있도록 북한체제의 변화를 견인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읽고 남과 북의 수요를 토대로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대북전략
 -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추동하는 전략적

합의를 지니는 교류협력 추진

- 북한을 개혁·개방,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등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전략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것

■ 정책기조 1»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 견지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대통령, 8.15 경축사)

-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 필요
 -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6차 핵실험 9일만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실행에 있어 한미공조를 강화
- 아울러 고강도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병행 추진
 -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도 북한과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기조 견지
 -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상황에 따른 전략적 강조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대화과 제재 병행' 의 문재인정부 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할 필요
 - 북핵 해결을 위해 제재·압력과 대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이를 달성한다'는 현 정부의 대응기조 확인
- 일정기간 '강 대 강' 국면이 전개된 이후 북미간 극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 필요
 -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분명한 입장 필요

- 북미 대화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의 일환인 바,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종류의 대화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양자(북미, 남북), 소다자(한미중, 한미일) 등 '탐색적 대화'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국간 긴밀한 소통 필요

■ 정책기조2 ≫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 자체의 대응체계 구축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 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북한 미사일관련 NSC 전체회의, 2017.7.4)

-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한국형대량응징보복) 조기 구축
 - 북핵 미사일 위협에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다음 행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한미 연합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
 -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
 - 미군이 보유하는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 미군의 F-22, F-35B 순환배치와 전략폭격기 B-1B의 순환배치 등을 통해 억지력 강화에 기여
 -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추진
- 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 한반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격화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한반도 군사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 필요
- 金正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함
-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북문제에 있어 한미공조가 필수적인 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 필요
 - 1.5트랙 등을 활용, 한미간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의 공유 확대
-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전략협의체' 가동
 - 다차원적 '전략대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도록 견인
 - 한·미·중 3자 테이블에서 우리의 이해에 부합되게 미·중 간 전략적 이해의 교집합을 확대해나가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 추진

